	보 도 자 료	
	작성	도시정책·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(044-960-0320)
	배포	국토연구원 대외협력·지식자산팀(044-960-0438)
보도일시	■ 즉시보도가능	

“교통인프라 지하화,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업·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”

국토硏,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발간

□ 국토연구원(원장 임재만) 도시정책·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**국토정책 Brief 제1081호 “교통인프라 지하화,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”**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.

□ 연구진은 도시공간 혁신 평가지표로 연결성, 다양성, 중심성을 도출하고, 철도 및 도로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혁신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**국내 주요 사례로 ‘경의선숲길’과 ‘경부동탄터널’을 선정하여 도시공간 혁신 요소를 실증 분석**했다.

○ **(연결성)**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부에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유휴부지 내 보행축을 확충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도시공간의 거시적·미시적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

- 두 사례 모두 일정 수준의 연결성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, 그 영향은 국지적 범위에 한정

○ **(다양성)**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은 본질적으로 단일기능(공원, 녹지 등)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, 주변지역의 산업·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경우, 새로운 기능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

- 경부동탄터널의 경우, 지하화 이후 0~500m 권역에서 사업체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, 경의선숲길은 기존 상권(홍대·공덕·연남동 등)과의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, 소규모 공간 개입을 통한 도심형 상권과의 연계·확장은 지역 다양성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

○ **(중심성)**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상부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

- 교통인프라 지하화로 인해 발생한 상부공간이 도시의 교통 결절부에 위치하고

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았으며, 실제로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(β) 검토 결과,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

□ 그러나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**국내의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은** 아직 초기 단계로 법·제도의 미비, 사업 주체 간 권한 분절, 초기 설계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제약 등 **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**했다.

○ **(교통 측면의 효율성 강조)** 현재 지하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통행속도, 교통량,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공간의 연결성, 공간 활용의 다양성, 중심성 변화 등은 정책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

○ **(계획 및 사업 단계의 구조적 문제)** 많은 사업에서 상부공간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부공간 활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교통부문 중심의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

○ **(분절된 제도와 재정 구조)**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「도로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, 다양한 행정주체가 관여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상부공간의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혁신의 실질적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**연결성·다양성·중심성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-제도-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시**하였다.

○ **(연결성)**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 구축으로 **입체적 네트워크 혁신 전환**

○ **(다양성)**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, 창의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**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(가칭)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 구축**

○ **(중심성)** 기획-심의-시행-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**다층 의사결정 구조 상설화**

○ **(지속성) 전략-제도-사업의 연계를 제도화**하고 성과 환류를 내재화하여 **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**, 구조적 락-인 예방을 위한 적응적 설계를 원칙화하여 **고도화되는 성장형 공간운영 실현**

첨부. 국토정책brief 1081호(교통인프라 지하화,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 담당자(☎044-960-04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